

#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ABC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40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정·서식 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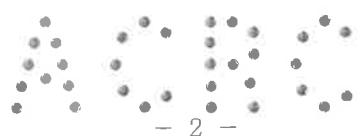
의 결 일 2020. 9. 21.

###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정·서식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21일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흥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지]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정·서식 개선 -

202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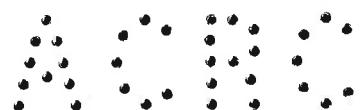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
1. 경비원 명부의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	2
2.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양식 다양화 .....	5
3. '동영상제작서비스업'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	7
III.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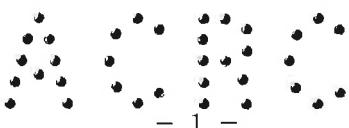


# I. 추진배경

## <정부 강조사향>

-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 의견을 내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19.11.19. 국민과의 대화)
- ▶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20.2.4. 국무회의)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을 초래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 경비원명부의 기재내용, 퇴직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동영상 제작서비스업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선정



##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경비원 명부의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경찰청)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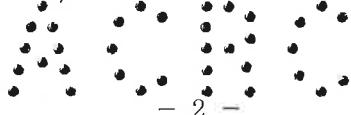
-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호송·기계 경비, 신변 보호, 특수 경비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도급 받아 하는 영업으로 구분

<경비업의 구분>

-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시설경비 업무)
-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호송경비 업무)
-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신변보호 업무)
- ▶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기계경비 업무)
- ▶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특수경비 업무)

- 경비원의 배치 기간 동안 신상 파악과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경비원 명부 작성·관리
- 이에 따라,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에 경비원 명부 작성·비치 의무, 특히,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 명부는 해당 경비원의 배치 장소에도 작성·비치(「경비업법」 제18조)

※ 경비업법에서 정한 집단민원 현장은 ▶노동쟁의행위 발생 사업장,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곳, ▶부동산·동산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는 곳, ▶행정대집행 장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 등



##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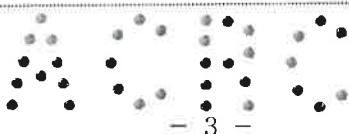
- 경비원 신상 파악과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이유로 경비원 본인의 재산 총액, 가옥 종류, 부업, 교우 관계나 가족의 학력, 직장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
- 또한, 기재 사항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보증인의 재산 정도까지 기재하도록 규정

<경비원 명부의 기재 사항>

관리 번호		경비원 명부										임용 일자 퇴직 일자
		재산	동산	부동산	재산 총액	가옥		부업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장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장		
교우 관계	성 명	주 소	직업 및 직책	보증인	성 명	주 소	재산 정도					

<관련 민원>

-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경비원 명부 서식은 경비원의 재산 내역, 가족사항, 교우관계, 보증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경비원의 신상 확인이라는 입법 취지를 넘어 과도한 행정요구이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20.4월 국민신문고)



## □ 개선방안

- 경비원 명부상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 예) 경비원 본인의 재산 규모, 교우 관계, 가족의 학력 등 개인정보 및 보증인의 재산 규모 등

⇒ 「경비업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14호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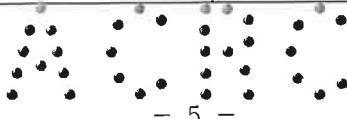
## 2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양식 다양화

(교육부)

### □ 현황

- 임용권자는 재직·퇴직한 공무원이 해당기관에 근무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
  - 퇴직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증명서에는 통상 인적 사항, 경력, 근무 연한, 퇴직 사유 및 상벌 사항 기재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 사유와 상벌 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외)
- ※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② 임용권자는 ---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 별지 제29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으로 발급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규칙)

<통상의 경력증명서>						<퇴직 사유와 상벌 사항 제외된 경력증명서>							
■ 서면증명서와 동일기록·동일 용지 사용 시 주의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1.1>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20.1.14.>							
경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근무기간			⑥ 직급	⑦ 직위		⑧ 근무부서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력 사항	⑨ 근무 연한	년 월		⑩ 최종 직위 또는 직급				년 월		⑪ 최종 직위 또는 직급		⑫ 근무부서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상벌 사항	⑬ 퇴직 이유	⑭ 모상		⑮ 징계				⑯ 용도		⑰ 종류		⑱ 처분형	
	연월일	종류	사항형	연월일	종류	처분형	연월일	종류	처분형	연월일	종류	처분형	
	연월일	종류	사항형	연월일	종류	처분형	연월일	종류	처분형	연월일	종류	처분형	
직위 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형				연월일		사유		처분형	
	연월일	사유		처분형		연월일	사유		연월일		사유		처분형
	연월일	사유		처분형		연월일	사유		연월일		사유		처분형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직인		직인		직인		직인		직인		
210mm × 297mm [면적: 50g/m <sup>2</sup> (가장 무게)]													
210mm × 297mm [면적: 80g/m <sup>2</sup> ]													



## □ 문제점

-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퇴직 사유와 상별 사항이 기재된 단일 형식의 경력증명서만 발급 가능

\*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교원·조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교육공무원법」 제2조)

-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상별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재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교육공무원의 직업 선택 제한

### 〈관련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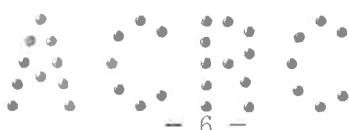
- 여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내 서식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과 같이 상별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는 상별사항이 없이 경력내용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등 상별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사항이 기재되어 이미 처벌을 받은 사항으로 인해 평생 개인적 불이익과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20.4월, 국민신문고)
-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상 서식 및 발급방식과 다른데 이로 인해 상별사항 기재 등으로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20.4월, 국민신문고)

## □ 개선방안

-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양식 다양화

\* 예) 퇴직사유 등이 삭제된 증명서 발급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



### 3 '동영상제작서비스업'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 □ 현황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시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
  - (취지·목적) 제조능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입찰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 육성
  - (주요 기준) 일정 기준에 따른 설비 등을 갖추고 생산시설·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
- 동일 소재지에 복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 운영 시 원칙적으로 각각 생산공장 격벽 분리, 별개 출입구, 생산시설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7조)
  - ※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 기준으로 판단
- 촬영·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동영상제작서비스업'이라 하며,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사업자등록, 생산시설(카메라, 편집 프로그램 등)구비,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등
  - ※ 동영상제작서비스업 예시 : 기업·학교·관공서 등의 홍보물 영상 제작·납품 등

#### □ 문제점

- (획일적 기준 적용) 동영상제작서비스업은 독립생산적 업무이나 일반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같이 격벽 분리, 별개 출입구 등의 기준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이용 사무실 임차 시 직접생산확인 제외
  - ※ 업무 구조·과정 등이 유사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정보인프라구축 등은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시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 미적용

### 〈관련 민원〉

-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동영상제작서비스 업종의 경우 따로 공장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으로 대체 할 수 있으므로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부적합 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17.12월, 국민신문고)
- 공유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독립공간이 아닌 이유로 직접생산 증명확인 불가판정을 받아 입찰에 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독립적 업무임에도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불가판정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20.2월, 국민신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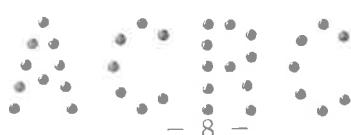
- (기준의 현실성 미약) 촬영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마이크, 녹음기, 편집관련 컴퓨터 등을 각각 갖추어야하나, 고화질 카메라, 마이크·녹음기 기능을 모두 보유(All-in One)한 고사양 제품(최신 휴대폰, 카메라 등)이 있어 현행 생산시설 기준의 실효성 저하

### 〈관련 민원〉

- 생산시설 확인 시 카메라, 마이크 등을 소유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근 휴대폰으로만 찍은 영화도 있듯이 휴대폰만으로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19.10월, 국민신문고)
- 휴대폰으로만 찍어 영화도 출품하는데 생산시설 기준이 과도한 것처럼 보이니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20.3월, 국민신문고)

- 또한, 업종에 대한 특성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생산직)를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으로 하여 1인 기업들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

※ 업무 구조나 제품제작 과정 등이 유사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정보인프라 구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기준



## <유사업종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

항 목	동영상제작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인프라구축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작업장으로 인정)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생산시설	① 촬영카메라, ② 마이크, ③ 녹음기 ④ 영상편집용 컴퓨터(PC) 및 편집프로그램	①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2인 이상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1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CG → 녹음 및 음악 삽입 → 완성	개발계획→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설치 및 인수 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필수 공정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	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 〈관련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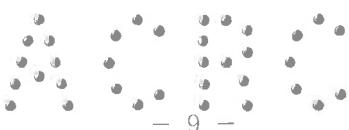
- 동영상제작서비스는 직접생산의 인원 인증기준이 상시근로자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동영상을 혼자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영화로도 출품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2명으로 인증기준을 둈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해 개정을 요청('20.2월, 국민신문고)
- 1인 미디어 제작자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생산인력 보유요건이 2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불합리('19.1월, 국민신문고)
- 영상제작 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면서 1인 영상기업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근로자 채용 시 부가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근로자 2명을 고용토록하는 조건은 불합리하니 이에 대해 개선을 요청('17.9월, 국민신문고)

## □ 개선방안

### ○ 동영상제작서비스업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 예) 격벽·출입구 분리규정 적용 제외, 구비장비 요건 및 생산인력 기준 완화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경쟁제품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기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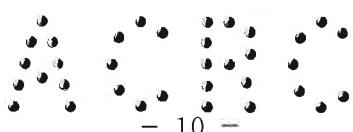


### III.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기관 : 경찰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경비원 명부상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비원 명부상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 예) 경비원 본인의 재산 규모, 교우 관계, 가족의 학력 등 개인정보 및 보증인의 재산 규모 등 ⇒ 「경비업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14호 개정</li></ul>	경찰청	'21.6월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양식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양식 다양화 ※ 예) 퇴직사유 등이 삭제된 증명서 발급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li></ul>	교육부	'21.3월
'동영상제작서비스업'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영상제작서비스업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추진 ※ 예) 격벽·출입구 분리규정 적용 제외, 구비장비 요건 및 생산인력 기준 완화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li></ul>	중소벤처 기업부	'21.3월



정 본 입 니다.

2020. 9. 23.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